

한옥활성화를 위한 정책동향

Policy trend for activation of Hanok

글. 신치후_ Shin, Chihoo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은퇴 인구의 증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 경제-인구사회학적인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문화 패러다임이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well-being), 참살이(heal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세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이유로 단독주택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는 13만 건으로 전년보다 25%나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 거래량입니다. 특히 도시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단독주택 매매는 2만 4천 건으로 51%나 늘었습니다.”

- ‘아파트 전세 사느니... ‘마당 있는 단독주택’ 인기’, SBS뉴스, 심우섭 기자 2016.04.01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세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영향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 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집값의 70~80%에 육박한 데다 저금리 기조로 돈을 빌리기도 수월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기가 쉬웠다”고 말했다.”

- ‘2015년 주택매매거래량 119만3691건...전세난에 사상 최대치 기록’, 중앙일보, 황정일 기자, 2016.01.11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친환경 주택으로 인식되는 목조주택, 특히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관련 정책과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전라남도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서울 은평한옥마을이 주목을 받으며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 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거주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주택용지를 분양한 경상북도 도청이전 신도시 69필지의 경우, 평균 분양률이 78:1을 기록하는 등 한옥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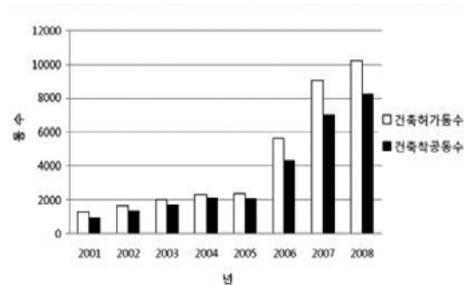


그림 1) 목구조 건축물 허가 및 착공동수(국토해양부)



그림 2) 한옥인허가수 및 주택건설 실적(한옥정책브리프, 22호, p3)

한옥활성화 정책과 사업

범정부적 한옥관련 정책의 시작은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07~'11)」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화·산업화·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을 선정하여 보존 및 연구지원,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야별 대표브랜드 육성, 한류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였다.

한옥분야는 전통 한옥건축의 보전·관리 및 활용,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한옥건축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라는 5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10~'14)」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경관,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 및 도시경관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 세워 건축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옥과 관련된 내용은 3대 목표가운데 세 번째인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2대전략인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건축문화의 세계화 추진'에 포함되었다.

「국격향상을 위한 신(新)한옥플랜('10~'14)」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산림청이 주축이 되어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과 한옥을 보급·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국가 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려는 목표로 한옥보급확산, 한옥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의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의 부문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국가한옥센터'가 설립되고 한옥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 등이 한옥 정책의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한옥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는 부처 특성에 맞는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한옥건축 지원 사업(‘08~현재)’을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한옥건축사업(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숙박체험시설 등 공공용도의 한옥), 건축물의 일부에 한옥요소를 접목한 한옥 디자인 사업, 한옥문화사업 중 홍보효과가 큰 사업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따라 각 1억~3억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35개소, 50.3억을 지원하였다.



그림 3) 전남 영암군 한국음식문화센터(2008)



그림 4) 충남 공주시 한옥생활체험관(2009)



그림 5) 서울 구로구 한옥 글마루도서관(2010)
* 201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올해의 한옥상’ 수상



그림 6) 강원 전통차 체험관(2011)

또한 현대적 거주성능을 확보한 저렴한 대중한옥을 개발하기 위하여 ‘1차 한옥기술개발 R&D 연구 사업(‘09~‘13)’을 마련하여 시공, 설계, 성능, DB구축 등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 현대 거주성능을 확보하며 685만원/3.3㎡의 비용으로 건축이 가능한 신한옥을 개발하였다. 현재 실증 구축을 내용으로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7) 실험한옥 은평한옥마을



그림 8) 실험한옥 내부

이 외에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양성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진행 중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2004~2011)에 약 116억원, 공공 문화시설 내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2009~2010 : 1회, 구로구 어린이 도서관, 안산 관산도서관, 여수시립 현암도서관, 군포 산본도서관)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총 124억 원을 한옥에 지원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까지 총 135억 원 가량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한옥관련 시범사업으로써 2000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 중심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림 9) 여수 시립 현암도서관



그림 10) 안산 관산 도서관

[표 1] 문화체육관광부 한옥관련 사업(2011년 기준)

사업명	주요내용	기간	예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	고택·종택 등 기존 한옥 개·보수와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 영비 지원	2004년~2009년	116억원
한옥공간 활성화 사업	공공문화시설 내 한옥공간 활성화, 어린이 도서관 내부를 한옥으로 리모델링	2008년~2009년 (혹은 2010년)	8억원
한옥텔 활성화 및 개발사업*	형태별 한옥텔 모델을 제시하고 한옥숙박시 설 개발	2010년	1.3억원
전통한옥 종합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한옥체험숙박 팸투어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	2009년~현재	9억원
합계			134.3억원

* 한국관광공사 시행사업

** 「2013 한옥건축산업 동향」, p.21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개발에서 보전, 관리, 재생으로 도시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이 관광문화 자원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효용가치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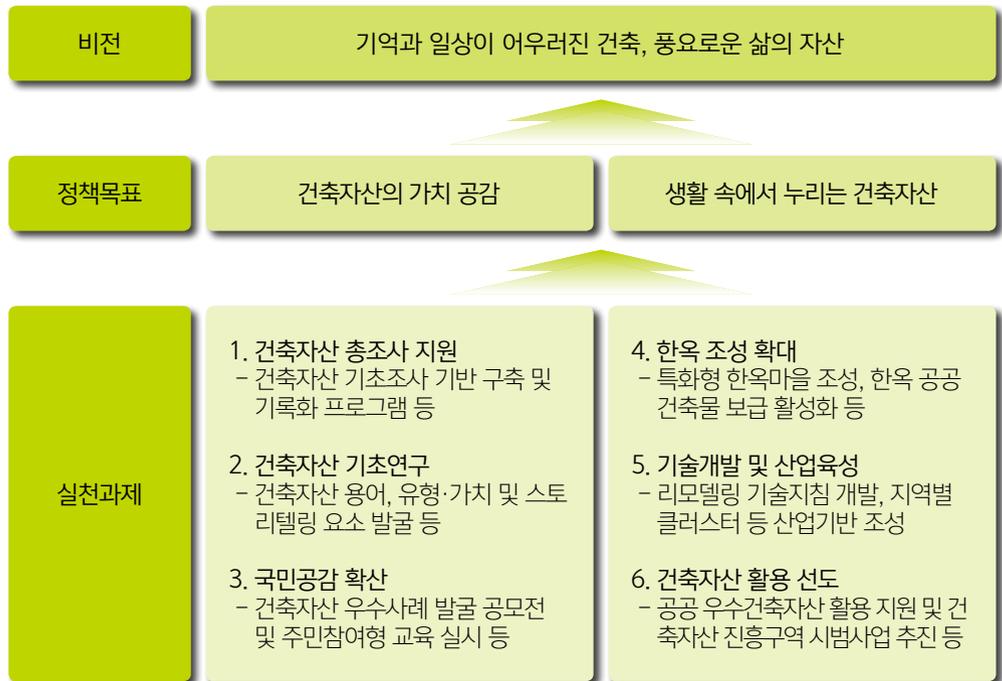
이에 따라 한옥의 경우 보전·활용하거나 새로 조성하기 위한 재정지원, 건축규제 완화(「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옥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시·도지사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한옥마을 조성 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하고(국가),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건축물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 및 건축법상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옥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0호 이상의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정비 지원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지자체의 특화지역을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의 기준을 정하여 ‘한옥건축기준(2015.12)’을 고시하여 일선 한옥지

원정책 시행과정에서 활용하게 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하고 현대한옥의 발전영역 확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2015년 현재 6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한옥지원관련 조례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한옥관련 사업 진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적극적인 활용과 조성을 위하여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16~’20)”이 수립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적은 건축자산의 조사, 기록화, 관리 등을 통한 건축자산의 가치 발굴 및 공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축자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대 목표와 6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및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한옥 등 건축자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및 사업 시행이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16)